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제3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8일부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금융권도 강화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현장을 중심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경제의 어렵고, 취약한 부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만큼,

정부도 필요한 정책대응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19년) : (韓)23.8% > (日)10.7%, (美)6.1%, (OECD)16%

※ 개인파산 신청건수(매년 1~10월) : ('18년) 35,760건 → ('19년) 37,954건 → ('20년) 41,257건

2. 경제·금융시장 동향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려움을 비교적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Delta 1.1\%$)이 회원국 중 1위,
G20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 12.4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초로 2,700pt을 돌파하였으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KOSPI 지수 : ('19말) 2,197.7 → ('20.11월말) 2,591.8 → (12.4) 2,731.5 → (12.7) 2,745.4

KOSDAQ 시총(조원) : ('19말) 241.4 → ('20.11월말) 349.9 → (12.4) 361.6 → (12.7) 366.9

회사채 시장 또한 발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회사채 ①월별 수요예측 참여율 : (9월) 373.1% → (10월) 401.8% → (11월) **544.9%**
②스프레드(민평4사, bp) : **[AA-, 3년]** (2월말) 41.3 → (10월말) 57.4 → (11월말) **49.1**
[A+, 3년] (2월말) 60.5 → (10월말) 88.4 → (11월말) **79.5**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빠른 상승세에는 코로나에 대한 안정적 대응, 기업실적의 호조, 원화강세 기조 및 반도체 경기회복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금년중 60여조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우리 증시의 빠른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증시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의 장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공매도 기회확대, IPO제도 개선, 시장조정자 제도개선,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3.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영국·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험추구성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대량생산 및 배포를 거쳐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면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2월 백신 접종을 개시하는 미국에서도 '21.5월 이후에나 집단면역 효과 기대

각국이 전례없는 수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BIS, IMF 등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의 상승,
유동성의 쏠림현상 및 레버리지의 확대 등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습니다.

국내 시장전문가들 또한, 초저금리 환경하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search for yield) 행위의 하나로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高수익·高위험 자산일수록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불안정성 확대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채 증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 및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기업부문의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 등으로
기업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 기업대출('20.1~9월) : 1,267.2조원 [전년말比 +149.2조원(+13.3%)]

부채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장기업 영업이익**(20.1~9월 코스피·코스닥) : **87.9조원** [전년동기比 **△5.3조원 감소(△5.8%)**]

다행히 3분기부터 상장사 기업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며,
신평사의 등급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KOSPI 상장기업 2분기 대비 3분기 결산실적**(연결기준, 금융업 제외)
: 매출액 +12.2%, 영업이익 +57.8%, 순이익 +81.3%

** 신평사들의 10월 이후 등급조정 추이: **등급하향 6개사, 부정적 등급전망 8개사**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는 한편,
필요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2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인하(100%→85%)하였는바,
금년말 종료되는 **가중치 인하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11월중 전월에 비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생계자금수요가 누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일)'의 시행(11.30일)을 앞둔 先수요와
IPO에 따른 대규모 증거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先수요가 점차 진정되고,
12월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4분기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에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작업반에서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에 대한
기존 감독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도 적극 참조하여

차주단위 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 생애소득주기 감안 및 적용반기 합리화 등 검토

이르면 내년 1분기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08년 글로벌위기 이후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위기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등은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유연화,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은 이에 대비하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하여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4.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팬데믹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산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길의 방향을 종잡기 어렵고, 불을 끄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 12.2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內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 경제의 숲을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울창하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 (산은 출자 5,100억원)
②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설비투자 지원 (산은 512억 기은 140억 출자)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0.5조원 조성 (산은 출자 2,400억)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론 등 低利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500억원 출자 ☞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로 정책모기지 제공

특히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시범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월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기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youth} 지속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재정 출연 1,950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또한
계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된지 8년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금소법 시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P2P 업체의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2P 업체 등록과정에서 신규영업이 정제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며,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대출 둔화로 연체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상환율**(총 대출액대비 상환액)도 **안정적으로 상승**
(연체율)6.45% → 10.37% (**상환율**)67.86% → **76.39%** ('19년→'20.9월, 상위 5개사 기준)

다만,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투자 계약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원리금 상환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는 등
P2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될 것이고,
다시 돌아올 우리의 일상이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하기 위해서는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더욱 빠르고, 부지런하게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요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점검해 나가는 한편,

우리 경제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